

# 고용허가제는 민간 브로커 개입을 엄격히 차단하고 있으며, 향후 충분한 의견 수렴을 거쳐 균형 있는 사업장 변경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.

## 1. 관련 기사

□ 7.27.(월) 한국경제, “브로커가 점령한 외국인 고용시장”

- 26일 중소기업계에 따르면 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선발과 알선을 담당하는 E-9 근로자 채용 시장에도 브로커가 활개를 치기 시작했다.
- 고용노동부는 인권 강화를 명분으로 E-9 외국인 근로자의 최초 근무 기간 기준을 3년에서 1~2년으로 낮추고, 지역 제한도 일부 풀어주는 방안을 오는 9월 정기국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.
- 중소기업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고용허가제의 근간이 흔들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. 고용노동부를 거치지 않고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(E-9 비자)를 특정 기업에 지정 알선하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어서다.

## 2. 설명 내용

□ 고용허가제는 공공기관이 직접 외국인노동자 알선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로, 외국인노동자(E-9)을 고용하려는 사업주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구인 신청을 하여야 하고, 고용센터는 미리 작성해 둔 구직자명부 내에서 구인조건에 맞는 외국인노동자를 기업에 알선하여 상호 근로계약이 체결되도록 하는 제도임

- 즉 고용센터의 알선을 벗어나 사업주가 자체적으로 구인 광고를 올리고 민간 브로커의 소개를 받아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는 합법적인 틀 내에서는 이루어질 수 없음
  - 향후 알선 과정을 점검하고, 브로커 개입 여지 등이 확인될 경우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음
- 사업장 변경 제도와 관련해서는 「외국인력 통합지원 TF」(’25.12~’26.2월 까지 운영) 논의 결과를 토대로 세부 내용을 검토하고 있으며, 구체적인 제도 개선방향 및 9월 정기국회 논의 등은 정해지지 않은 내용임
- 앞으로 추가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와 기업의 인력 운용 측면이 균형 있게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한편, 구인난 심화 부작용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완대책도 병행 추진할 계획임
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    |     |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|
| 담당 부서 | 국제협력관<br>외국인력담당관 | 책임자 | 과 장 | 한은숙 (044-202-7157) |
|       |                  | 담당자 | 사무관 | 최주현 (044-202-7145) |

